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새로운 발견(-犬)



김민규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어느 날 60대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외로운 노부부만 남아 반려견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 여러 얘기를 주고받은 끝에 결국 입양을 결정하게 됐다.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는 꽤 지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산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다가 IMF 이후 잠시 주춤했다. 2005년도 이후 입양된 반려동물 수와 사료 및 용품 등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의 반려동물 시장은 약 4조

원 정도로 대규모 산업이 됐다. 이외에도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가적 가치까지 합산하면 엄청난 경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세계미래학회의 미래 10대 유망 산업 중 하나로 선정된 반려동물 산업은 크게 분양, 진료, 사료 및 용품, 훈련, 문화 콘텐츠, 동물 복지, 동물 매개 치료 분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야에 따라 상당 부분 정착돼 있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개나 고양이가 무슨 문화가 되겠느냐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가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반려동물은 현대인의 새로운 문화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한동안 많은 대학에서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신설해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비한 인력 양성을 시도했으나 반려동물 산업이 사들해지면서 많은 대학에서 학과를 폐쇄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대학의 지식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으로 반려동물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으로 분야 등의 인력을 양성했다더라 더 참신한 반려동물 문화가 증가하는 반려동물 수만큼 발전했을 것이라고 본다.

외국의 경우 평생교육원과 같은 교육 기관에서도 ‘동물 매개 치료’(pet assisted therapy·PAT) 전문가를 양성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심리 정서적 재활 치료에 활용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몇 개 대학이 PAT 전문가 양성과 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학계 및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 동물 복지 분야이다. 동물복지법 시행 이후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매체에서 공장식 동물 생산 및 동물 학대에 관한 내용이 보도돼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국민 의식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동물 복지 전문가의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

현제의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등 자원봉사단체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교육기관 및 정부 기관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기관 등에서 많은 정책 방안을 쏟아 내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한다.

최근 대통령이 유기견을 입양한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유기 동물’을 입양할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가시화되면 유기 동물의 학대 및 방치와 관련된 문제가 줄어들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에서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노인 복지 정책으로 반려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입양한 반려동물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상실과 사별로 인해 노인들에게 더 큰 고독감과 비탄을 안겨 줬다는 보고는 우리가 향후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민간단체와 학계 및 정부는 더욱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호 협력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본다.

종교칼럼

얼굴은 내면의 초상화이다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초상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얼굴 모습은 어떠한 빛을 띠고 있는지 한번쯤은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얼굴들은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각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사실 이전의 얼굴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사실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얼굴의 인상과 표정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40세 이후의 얼굴은 매우 중요한 정보인 것입니다.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이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신도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던 중 한 시인이 ‘큰 바위 얼굴은 어니스트다’라는 외침을 듣게 됩니다. 이에 어니스트는 더 나은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열망하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내 얼굴을 조각해가려고 한다면 그 모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델이 어니

스트에게는 큰 바위 얼굴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참으로 위대한 위인이란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의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할지라도 마음 속에 담고자 하는 스승을 삼고 그를 닮아 가고자 노력할 때 자신 역시 진실로 위대해지고 평화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이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조각가인 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은 누구일까요?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 예찬’에서 ‘평화라는 평화 중에 가장 훌륭한 평화만을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모르고 욕심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천진하고 평화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도 자라고 성장하면서 온갖 세파에 시달리다보면 부단히 그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때때로 웃었다, 울었다, 성냈다, 기뻐했다하며 우리들의 얼굴은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를 믿고한 가토 유다의 얼굴의 모델을 찾던 중 교도소에서 가장 사악한 모습을 한 사형수를 선택해 얼굴을 그립니다. 그러나 얼

마 후 그가 6년 전에 그린 그림에 등장한 착하고 선한 예수의 모델이었음을 알고 더 이상 예수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합니다.

이는 가정과 사회생활에서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을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 얼굴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개의 살을 찢기는 아픔속에서 진주가 나오듯, 어렵고 고달픈 일들을 극복함으로써 진실하고 인자하고 겸손한 얼굴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근본 자리에 마음을 어떻게 갖고 두고 꾸느냐에 따라 변화합니다. 상대방과 함께하는 마음가짐으로 즐거움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밝은 광명이 기다리듯이, 요즈음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이 밝아졌음을 체감합니다. 그 밝은 웃음으로 아직도 어둡고 소외받는 곳에 행복의 기운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나의 밝은 얼굴이 영원한 밝은 얼굴로 지속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고

‘자립형 지방정부’로 가는 길



김종효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을 거듭 강조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방산업 육성, 실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인해 더 이상 진전된 지역발전 전략이 나오지 못했다.

요즘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국제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라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재원이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창의적인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정부가 자주적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력의 분점을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만든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로, 제117조 지방

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하는 것으로, 제120조에는 지방정부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 인사, 권한, 선거, 기관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정부의 법률로 규정하는 조항들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상호보완 관계로 볼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서로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출범부터 ‘기술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정부에 인사, 조직, 재정권 등이 부여될 때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역산업육성이 잘 된 수도권과 열악한 지역의 격차가 더 커지게 마련이다.

그동안 지역정책은 주로 경제적 타당성과 인구 규모로 권역별, 지역별 예산 배정액을 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호남권 지역이 차별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낙후 정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시내면세점이 없고,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도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시키면서도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차등적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제도로 활용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가 중치를 현재 20%만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30% 이상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소득과 지역낙후도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적 재정지원, 그리고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최연혁 소장은 좋은 국가의 기본조건으로 ‘균형 잡힌 분배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꼽고 있다.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면 사회 통합을 이루기 힘들고, 통합의 정치를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社說

우리 밀 재배 장려하더니 이제 외산 모르쇠?

우리 밀 생산 농민들이 “값싼 수입 밀 때문에 판로를 찾지 못해 재고가 쌓이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밀 생산 농민 200여 명은 엇그제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우리 밀을 주정용 납품과 함께 학교·군부대·기업체 급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쌀에 이어 ‘제2의 식량’으로 불리던 밀은 1984년 정부의 수매 중단으로 한때 사라졌다가 1990년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펼쳐지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8년 정부가 ‘밀 자급률 5.1% 달성’ 정책을 선언하면서 2006년 0.6%이던 자급률은 올해 1.6%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수입 밀보다 가격이 네 배 이상 높은데다 주정용 밀 공급과 군부대 납품 등에서 쌀 소비 우선 정책에 밀려 우리 밀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올해 밀 생산량은 지난해와 같은 수

준인 3만3000여t. 하지만 한해 국내 밀 소비량이 2만5000t에 불과해 나머지 8000여t을 창고에 쌓아 뒀아 할 처지다. 여기에 지난해 소비하지 못한 밀 7000여t까지 더하면 1만5000여t이 재고로 남게 되는 셈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재배를 장려해 놓고 소비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게다가 수매 자금마저 동이 나 올해 수매 대금도 절반에 못 미치는 140억 원가량만 지급된 상황에서 이제 파종을 중단하겠다는 농민들도 많다.

대책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매년 주정 용원에 우리 밀 1만t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 및 학교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서 우리 밀 소비를 의무화하면 된다. 대북 지원 대상에 쌀뿐 아니라 우리 밀도 포함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전체적인 식량자급률 및 쌀 생산조 정책 등 종합적인 틀에서 우리 밀 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레탄 농장 교체 애타는 부모 맘 생각해 봤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전남 지역 초·중·고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이 제때 교체되지 않아 한창 뛰어놀 학생들 유해 물질이 사용되지 못하거나 일부 공간에서만 운동이 가능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우레탄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인 운동장에서 뛰노는 일부 학생들도 있어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격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물질이 나와 교체 대상으로 결정된 학교는 총 174개교였다. 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교의 우레탄에 대해 늦어도 여름철(8월말) 내에 교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77개교만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97개교(55.75%)는 설치 업체와 교육청이 하자 보수 공사 대상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바람에 교체 공사가 오랫동안 지연됐다.

교체 공사가 늦어지면서 해당 학교들은 운동장 주변에 학생들의 접근 금지 팻말을 세우고, 빗물로 인해 우레탄의 유해 물질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 포장까지 씌워 놓은 상태여서 학교가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교육청이 행정적인 절차를 따져서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 시공 후 조치’가 마땅하다. 교체 공사를 거부하는 시공 업체와 장기간 협상을 하기보다는 우선 새로운 시공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한 뒤, 애초 시공 업체와 행정적·법적 다툼을 벌였으면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레탄은 시간이 지나면 가루로 변해 날리기 때문에 중금속이 함유된 트랙에서 학생들이 뛰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체 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후보시 시절에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를 약속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헬기 기총소사 등 5월 일진상 규명 작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취임 이후에는 영·호남이 공유하고 있는 고대 가야사에 대한 연구도 주문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때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등을 바탕으로 일제 잔재 청산을 주도했지만, 문 대통령의 역사 챙기기는 고

5·18과 동학

대하다. 5·18을 대한민국 역사에 자리매김시키려는 대통령의 실천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5·18을 헌전 대통령의 ‘대못’을 연상케 한다. 어떤 세력이나 정권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약속대로라면 5·18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쓰인 헌법 전문에 기록될 것이다. 때마침 전북 지역에서는 동학농민혁

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읍 지역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전북도의회도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의 의지가 모이고 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명은 정작,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전남은 동학농민혁

이 활발하게 전개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장소에는 동학혁명

최초로 경군(京軍)을

제압한 역사를 기념하는 활동전투 승전탑이 있고 장흥엔 동학농민 혁명 기념탑과 기념관까지 있다. 동학농민혁명 최후 격전지이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광주·전남·북 지역을 관통하는 동학과 5·18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자유·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이 면면히 이어졌다는 것이다. 5·18이야 말할 것 없지만 동학농민혁명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광주·전남 역사의 한 부분이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